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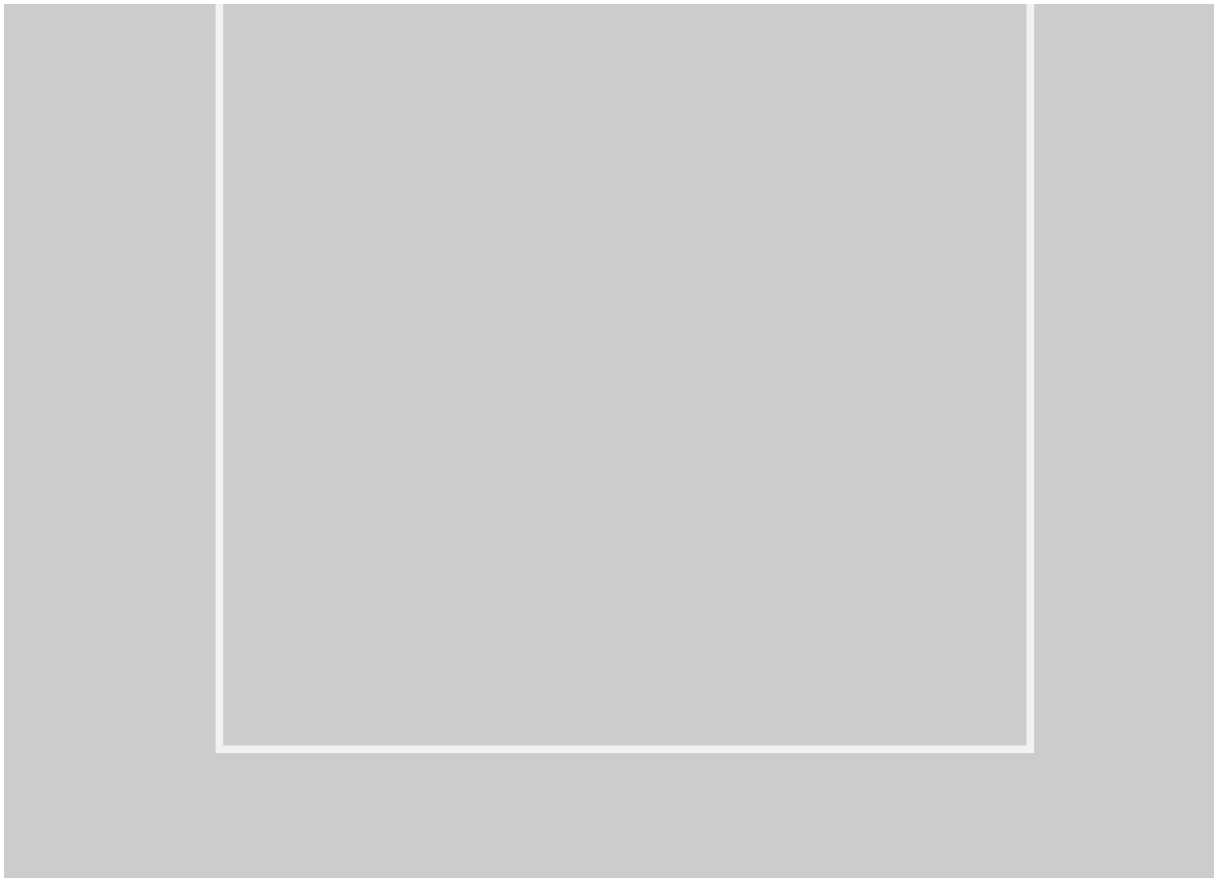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안]

- 국민연금·건보료·전기요금 납부정보로 신용점수 가점 부여방안 연구 -

2021. 7. 22.



요약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 [요약]

- ◆ 성실납부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보다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

- 개인신용평가회사(CB)는 금융정보(예 : 대출 상환/채납)와 비금융정보(예 : 세금 납부/채납)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용점수(1~1,000점)로 계산
 - 금융정보(성실납부·채납 모두) 및 비금융정보(채납)는 CB社에 자동 전달되나, 비금융정보(성실납부)는 CB社에 자동 전달되지 않는 상황
 - 개인이 직접 CB社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제공하여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나,
 - 자발적인 제출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고('20년 기준 약 130만명, 전체의 2.7%), 자료의 한계로 가점 부여 수준도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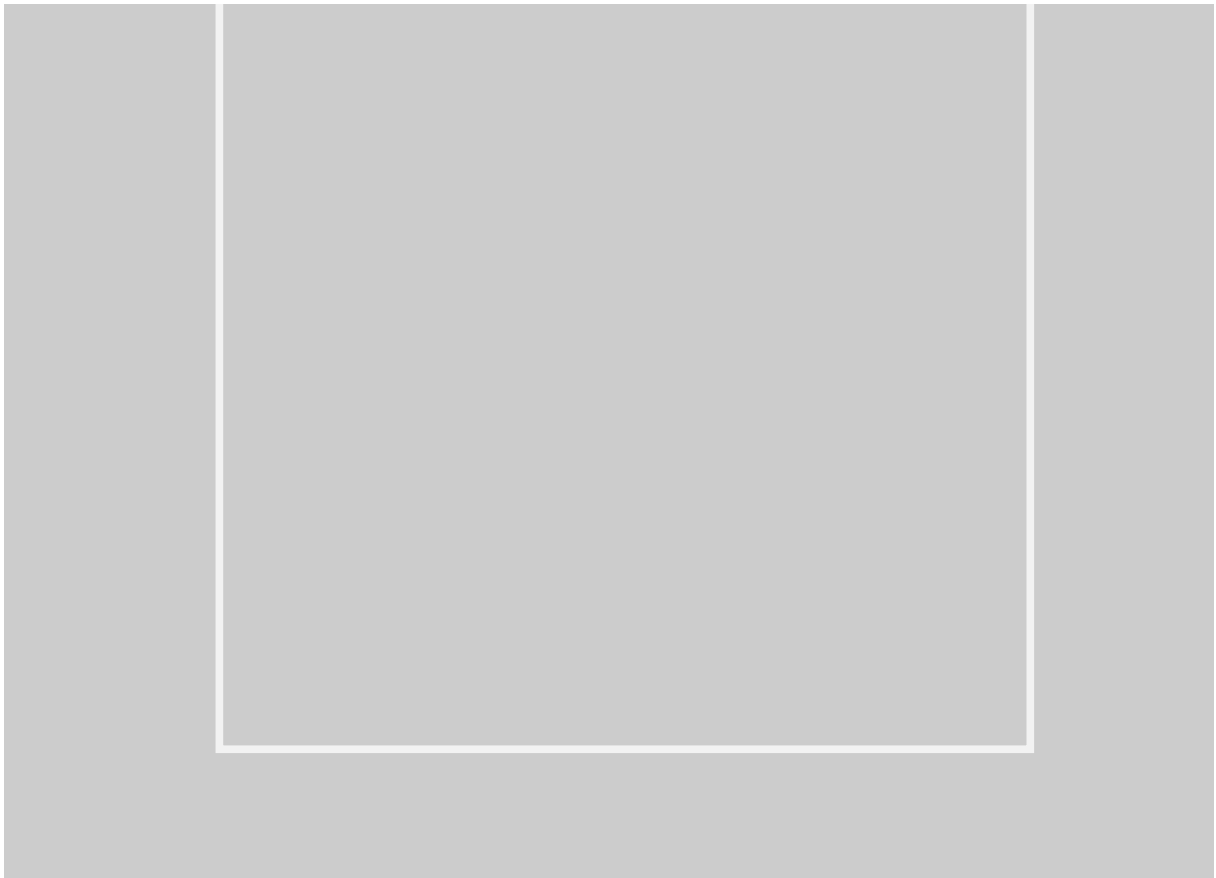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4차위·복지부(건보, 연금공단)·산업부(한전)·금융위(신정원, CB社) 공동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21.7월~'22.3월)
 - 최근 3년간의 성실납부정보(건보료, 연금, 전기요금 등)와 신용정보를 결합분석하여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가점 부여 방안 마련
 - 납부금액과 납부여부 데이터 활용의 차이, 세대단위 납부(건보료) 및 건물단위 납부(전기요금) 등 데이터 특성에 따른 차이도 함께 분석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가점 부여 방안 연구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도 마련
- 공동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후, (가칭) 성실납부정보 활용계획(안)을 4차위 데이터특위에 보고('22.1분기)

①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21.下), ②이후 활용방안 마련('22.1Q)



החלפה



순 서

I.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	1
II. 그간의 추진 경과	2
III.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3
IV.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6
【붙임1】 관련법령 :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7
【붙임2】 국민연금 성실납부와 불량을 간 상관관계 분석 ..	9

I.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려는 이유

- 개인신용평가회사(CB*)는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용점수(1~1,000점)로 계산하여 금융회사에 제공

* Credit Bureau / 국내 대표 CB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또는 **KCB**, NICE평가정보(주) 또는 **NICE**

- 금융회사는 CB社로부터 받은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자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특정 개인에 대한 대출 가능여부, 금리 수준 등을 결정

- CB社가 활용하는 정보는 크게 금융정보와 비금융정보로 구분

- 금융정보의 경우, 긍정적(예: 대출상환)·부정적(예: 체납) 정보 모두 해당 금융행위 발생 즉시 관련 정보가 CB社로 자동 전달, 신용평가에 반영

- 비금융정보의 경우, 부정적 정보(예: 국세 체납)는 CB社로 자동 전달되는 반면, 긍정적 정보(예: 건보 납부)는 CB社로 자동 전달되지 않음

⇒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1,197만 명)는 부정적 정보 위주로 평가받는 상황

구분	긍정적 정보(성실납부)	부정적 정보(체납)
금융정보	- CB社 자동 전달 - 대출금 상환이력 신용카드 사용이력 등	- CB社 자동 전달 - 대출금 체납 신용카드 체납 등
비금융정보 (또는 공공정보)	- CB社 자동 전달 X - 건강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납부 전기요금 납부 / 전력사용량 통신요금 납부	- CB社 자동 전달 - 국세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지방세 체납 전기요금 체납 등

- 한편, 개인이 직접 CB社에 성실납부정보(또는 긍정적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16~)

- CB社 홈페이지(KCB : allcredit.co.kr, My데이터 메뉴 / NICE : credit.co.kr, My부스트 메뉴)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 핀테크 업체 서비스(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토스 등)를 통해 성실납부정보를 CB社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 상향 가능

⇒ 자발적 제출이다 보니 일부만 혜택,* 자료 확보·분석 한계로 가점 부여도 제한적

* 가점을 받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지만 '20년 기준 약 130만 명으로 전체의 2.7% 수준

◆ 성실납부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의 보다 공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지원할 필요

II. 그간의 추진 경과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09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

- ('97년~)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령을 통해 세금, 고용보험료 체납 등 비금융분야 부정적 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
- ('09년)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에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이후 관계기관 간 정보 제공 범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중단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성실납부정보의 유용성 및 활용 시 안전성 등에 이견)

- ◎ **신용정보법**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략)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한국전력공사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 (중략)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16년) 개인이 직접 CB社에 성실납부정보* (또는 긍정적 공공정보)를 제공하여 신용점수에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공요금(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등

- ('20년) 감사원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1,100만여 명의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신용등급 개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 금융위에 우량 공공정보를 집중·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 신용정보법 개정('20.8월 시행)으로 공공기관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 가능해짐

- ◎ **금융이력 부족자**(Thin-filer) : 최근 3년 내 카드 사용이력 및 3년 내 대출 경험이 없는 자
 - 전체 평가대상 4,803만 명 중 1,197만 명, 이중 **청년층 412만 명** ('20, KCB 기준, 단위 : 만명)

구분	20세 미만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전체	105	355	413	394	443	918	926	1,249	4,803
금융이력부족자	98	206	114	92	82	128	124	353	1,197

Ⅲ.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①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들이 **신용점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관계부처·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 ②이후 **활용방안 마련**

※ '21.5.6, 5.7, 5.28, 6.17, 7.8, 4차위·복지부·산업부·금융위 등 업무협의를 통해 주요사항 논의

- 1 (실무협의체) 관계부처·관계기관 담당자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공동연구 관련 현안사항 공유 및 해결 추진
 - (구성) 4차위(데이터기획관, 데이터성과창출팀장), 복지부(보험정책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산업부(전력시장과장), 금융위(금융데이터정책과장), 건보, 연금공단, 한전, 신정원, KCB, NICE 등
 - (운영기간) 2021.7월 ~ 2022.3월 / 수시
- 2 (기관별 역할) 복지부(건보, 연금공단) 및 산업부(한전)는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위(신정원, CB社)는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한 연구 진행,
연구 결과는 관계부처·기관이 공동 검토
 - ※ 상기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부처·기관 자체 부담
- 3 (정보제공 범위)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종류) 복지부/건보 : **건강보험료 월별 납부금액**
복지부/연금 : **국민연금 월별 납부금액**
산업부/한전 : **전기요금 월별 납부금액, 월별 전력사용량**
↳ **통신요금 납부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을지 통신사 추가 협의 진행**
 - (규모) 100만 건*(전국민 약 2%)의 유효데이터(결합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 * 지역·연령·소득·성별 등을 고려, 통계적 유의성 확보
(신용정보와 결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결합이 되는 정보주체 수 기준 100만 건 제공)
 - (기간) 최근 3년 데이터 제공(정보제공 시점 1년 전 기준)
- 4 (연구 절차 및 방식) ①사전 협의 → ②정보 전달 → ③가점 부여 방안 연구 → ④연구결과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

① (사전 협의) 담당자 지정, 결합키 생성 방법 논의, 안전한 정보 전달 방식 확정, 결합전문기관 일정 논의 등 필요사항 사전 협의

② (정보 전달) 건보·연금·한전 → 신정원

- 데이터 외부반출 부담 경감을 위해, 결합대상 정보를 확인하여 미리 결합률을 도출한 후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

◎ 미리 결합률을 도출하여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하는 방안 예시

- 신정원, 사전 결합 확인용으로 n배수 후보 매칭키를 추출하여 건보·연금·한전에 제시
- 건보·연금·한전 결합이 가능한 매칭키 및 샘플링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보조정보를 제공 (예 : 건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등)
- 신정원, CB社와 협력하여 통계분석에 적절한 샘플링 후보 도출, 이후 최종 샘플링 후보에 해당하는 매칭키를 건보·연금·한전에 전달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정보를 전달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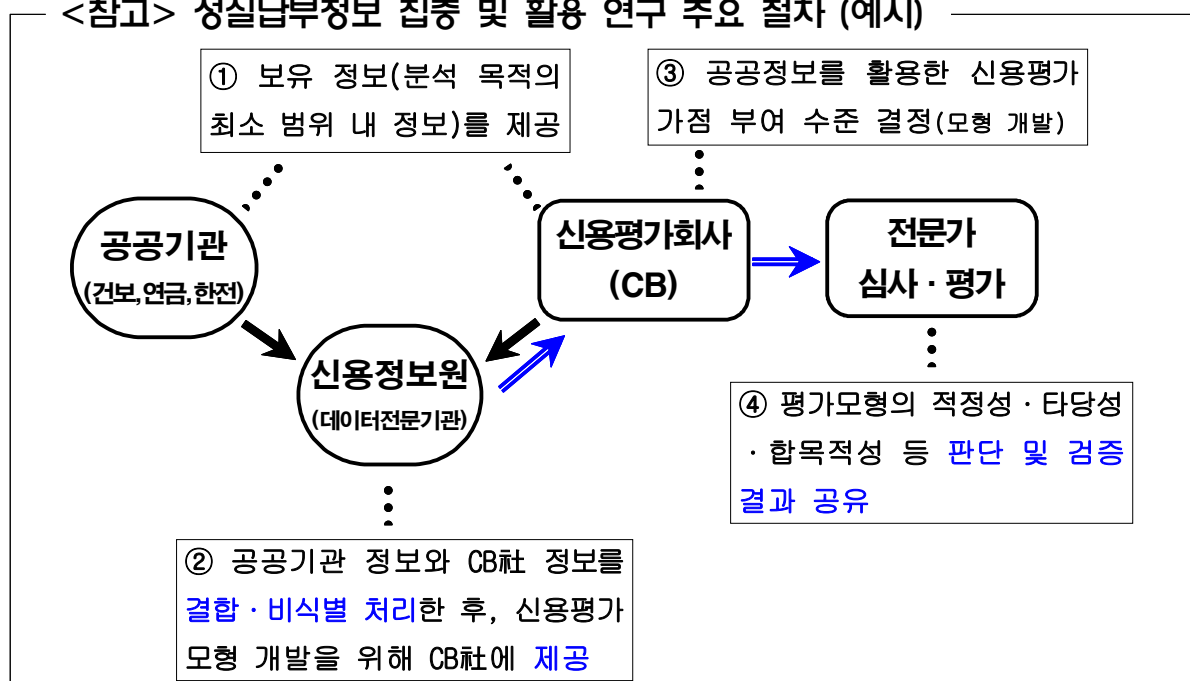
③ (가점 부여방안 연구) 신정원은 제공받은 정보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결합하여 CB社에 제공하고,

신정원 및 CB社는 성실납부정보와 연체 간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비금융분야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한 가점 부여 방안 제시

④ (연구결과 공유) 연구 결과를 4차위 및 각 부처·기관과 공유*

* 다만, 연구결과의 대외 공개 범위는 추후 공동연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결정

<참고> 성실납부정보 집중 및 활용 연구 주요 절차 (예시)



⑤ **(추가 분석 진행)** 추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결과 제시

① '월별 납부금액'과 '월별 납부여부' 정보를 기준으로 각각 분석한 연구결과를 제시

②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의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연금보험료**(납부의무가 없는 납부예외자 또는 적용예외자인 경우), **전기요금**(전기사용계약 당사자와 실사용자가 상이한 경우 등) **특성**이 연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

③ 사용자 신청기반 정보 제공과 **일괄** 정보 제공 간 효과성 비교

⑥ **(외부 검증)** 가점 부여 방안(평가모형)의 적정성·유용성 등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때 건보·연금·한전의 전문가도 검증 논의에 참여

* 「신용정보법」 제26조의3의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활용
(학계 및 연구계 3명, 금융계 1명, 법조계 1명, 소비자 보호 전문가 1명으로 구성)

⑦ **(오남용 방지)** 성실납부정보의 오남용 방지 대책을 연구결과에 포함

○ CB社가 성실납부정보를 신용도를 높이는 **가점부여 용도로만** 활용토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 정보제공 중단 및 제재 조치 추진

- (예) CB社가 신청원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 작성하는 신용정보 제공·이용 약약서에 준수사항 및 제재 조치 서약

◎ (참고사례) "신용정보 이용계획" 관련 정보 이용 약약서

- **(준수사항)** 신청기관(CB)은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리정보'를 제2금융권 이용 고객의 신용차별 완화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청기관 외의 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재 조치)** 신청기관이 본 약약서를 위반한 경우 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금리정보 포함)의 제공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원에 발생한 모든 손해는 신청기관이 부담한다.

IV.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 기대효과 >

- ☐ 공공요금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금융이력이 부족**하더라도 납부이력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받아 금융접근성 향상
 - 자발적 제출에 의존하는 현재와 달리, 성실납부정보가 집중·활용될 경우 보다 **충분한 자료 분석**이 가능해져 **가점폭 확대**도 예상

< 신용점수 가점부여 효과 예시 >

- **(적용 전)**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A씨는 신용점수가 685점으로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2금융권**(저축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돈을 빌려 연간 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
- **(적용 후)** 국민연금 성실납부 이력이 반영되어 신용점수가 720점으로 상승하게 될 경우 A씨는 **1금융권**(시중은행)에서 6%의 금리를 적용받아 매년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3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어 연간 180만 원을 절감

- ☐ 성실납부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활성화 기대

* CB社は 통신요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통신스코어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중
→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통신스코어가 높은 경우 대출을 승인하는 여신상품 출시(통신스코어 적용 후 여신승인률 7.4%p 증가, 불량률 1.1%p 감소)

< 향후 추진일정 >

- ☐ 성실납부정보 기반 신용점수 향상(안) 4차위 데이터특위 보고 : '21.7월
- ☐ 성실납부정보 유용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 '21.하반기
- ☐ 성실납부정보 활용 관련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사항 검토 : '21.하반기

* 성실납부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구체적 방안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개정안 마련 등(금융위)

- ☐ 공동연구 결과 검토 및 활용방안을 구체화한 후, (가칭) **성실납부정보 활용 계획(안)**을 4차위 데이터특위 보고 : '22.1분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삭제

②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에 필요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한국전력공사법」
6. 「주민등록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9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란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제공 범위는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로서 보험료 납부 정보**

2. 전기사용에 관한 정보로서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범위는 별표 5에 따른다.

- < 별표5 >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별표 2의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

제공의 이유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
16. 법 제32조제6항 제10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전까지 나. ~ 다. (생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알리거나 공시하는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 명 대상 성실납부 개월수 및 불량률(12개월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을 분석한 결과, 성실납부자의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점 부여가 가능한 것을 확인 (복지부·금융위·국민연금·KCB, '20.7월)

분석 결과 - 성실납부자 특징

■ 성실납부 여부 및 개월수 별 금융활동 양상 분석

○ 집단간 신용정보항목 평균 / 분포 비교

■ 상대적으로 성실납부자들의 금융거래가 활발하고 건전한 금융활동을 보임

○ 대출 건수 및 카დი용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연체경험율은 낮게 나타남
- 금융활동은 더욱 활발하지만 리스크가 낮음

→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

비교	성실납부여부			
	비성실	성실	성실개월수	
			3년미만	3년이상
연체경험율	18.4%	11.6%	15.1%	9.5%
대출건수	1.29	1.56	1.35	1.64
신용카디용금액	911만원	1,794만원	1,078만원	2,067만원

분석 결과 - 가점 확대 가능성 검토

■ 성실납부 여부 및 개월수에 따른 불량률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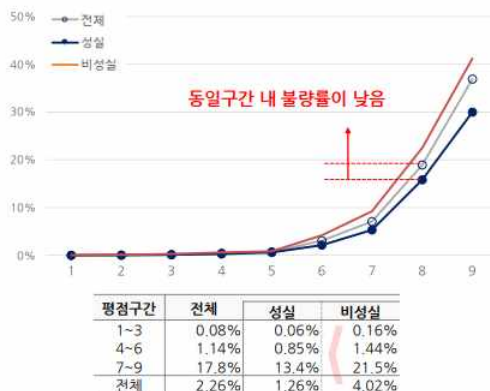
○ 집단간 신용등급별 불량률 분포 산출 / 비교분석

■ 성실납부자의 경우 불량률이 동일 평점구간 내 전체고객에 비해 낮음

○ 뿐만 아니라 성실납부 개월수에 따라서도 불량률이 차이를 보임

→ 성실납부자에 대한 가점 부여가 가능하며,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실납부 여부에 따른 등급별 불량률



성실납부 개월수에 따른 등급별 불량률

